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	2021. 6. 24.(목)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부서	원양산업과	담당자	• 과장 이규선, 사무관 김영민, 주무관 서범석 • ☎ (044)200-5360, 5368, 5371		
보도일시		2021년 6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 해수부,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6월 25일(금)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그간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효과적인 통제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첫 시작점인 항구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09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2009. 11. 발효)」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가입)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하였다.

* IUU 의심 선박의 불법어획물 반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어획물 적재 선박의 어획량, 어획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항만국 검색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고시 제정으로 기존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폐지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①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하여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였고, ② 기존 고시에 누락되어 있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을 전면 반영하였으며, ③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항만국검색 적용대상, 외국과의 협력, 항만국 지정, 항만이용, 검색 실시, 검색결과 사후조치, 항만국 내 청구권에 관한 정보 등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IUU 어업의 개념

- 불법어업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통칭하는 개념임
 - *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수산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9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됨
 - FAO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중심으로 IUU 근절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가 마련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국내법에 의한 제재 조치도 도입되고 있음
 - * IUU라는 용어는 '97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FAO에서 '01년 채택한 국제행동계획(IPOA-IUU)에서 구체적으로 정의
 - * RFMO :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FAO의 IUU 국제행동계획상 정의

- Illegal(불법) 어업
 - 허가 없이 또는 국내 규정을 위반하여 자국 관할 수역에서 행해지는 어업 활동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전관리 조치 또는 국제법 관련 규정 위반
- Unreported(비보고) 어업
 - 국가나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 활동
- Unregulated(비규제) 어업
 - 무국적 어선에 의해 행해지거나, 적용가능한 보전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어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해진 어업활동

□ 제정 이유

- EU IUU어업 사무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IUU어업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와 항만국조치협정의 철저한 이행을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우리정부는 IUU어업 근절 및 항만국조치협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존 고시인 「수산물 적재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에 「항만국 조치협정」 주요내용을 추가하여 「항만국 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기존 고시인 「수산물 적재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EU IUU어업 사무국에서 우리나라의 IUU어업 예방 및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항만국조치협정 규정에 대한 입법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IUU어업근절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기 위해 「항만국 조치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만국검색 적용대상, 외국과의 협력, 항만국지정, 항만이용, 검색실시, 검색결과 사후조치, 항만국내 청구권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항만국검색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입항신고, 입항허가, 검색계획의 수립, 검색대상 결정 통지, 검색관 지명, 보고서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명시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